
 ◆ 政府 施策 ◆

工發基金 2510억 支援

— 商工部, 94년 工業발전기금 운용요령 고시 —

상공자원부는 기계류등의 국산화 확대와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工業발전기금의 올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372억원 늘어난 2510억원으로 확대하고 용자 취급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상공부가 발표한 94년도 工業발전기금운용 관리요령(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16호, '94. 2. 25)에 따르면 올해 工業 발전기금 지원의 분야별 배분내용도 대폭 조정, 기계류 부품 및 소재 시제품 개발사업과 섬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섬유소재 및 패션디자인 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신발 및 직물 합리화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축소했다.

상공부는 특히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최근들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제품디자인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산업기술향상을 위한 시제품 개발사업에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9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환경보전과 관련 대표적 공해업종인 염색공단의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합리화사업중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섬유소재 및 패션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섬유소재 개발에 65억원, 패션디자인 개발에 2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용자조건에 있어서도 최근 기술개발 추세가 대형화하는 점을 감안, 3억원까지만 허용했던 시제품개발 자금의 동일인당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고 2개 이상의 업체가 민간생산기술연구소나 산업기술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개발사업 한도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첨단산업기술개발지원시에 1개 기업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 제한을 금년부터 폐지, 동종 업체간 공동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기금 용자절차도 간소화해 종전 2단계를 거쳐야 했던 심의과정을 총괄운용심의회 1단계로 줄이고 심의기간도 신청서 접수기한이 마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못박았다.

또 용자취급 은행의 기금대출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지원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성등을 중복 검토하지 않고 채권보전 조치만 취한후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섬유업종의 지역산업적 성격을 감안해 대구은행을 직물·섬유제품·패션디자인 분야의 용자취급은행으로 추가 지정했다.

'94 工業發展基金 部門別 支援 내역

〈단위 : 억원〉

지 원 부 문	지 원 규 모		
	'93	'94	증 감
1. 시제품개발	600	950	350
○기 계	300	460	160
○전 자	155	225	70
○전 기	25	65	40
○소 재	95	145	50
(일반소재)	(55)	(80)	(25)
(섬유소재)	(40)	(65)	(25)
○제품디자인	25	55	30
2. 첨단산업기술개발	400	500	100
(소프트웨어)	(40)	(50)	(10)
3. 합리화 사업	1,028	910	△ 118
○신 발	700	600	△ 100
○직 물	100	70	△ 30
○편직·봉제·염색	220	220	-
○패션디자인	8	20	12
4.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	110	150	40
계	2,138	2,510	372

'94 工業發展基金 운용개선 대비표

	현 행 ('93)	개 선 ('94)
1. 공업발전기금의 분야별 배분		
○ 시제품개발자금의 대폭 확충	600억원 지원	950억원 지원
－ 제품디자인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25억원	55억원 지원 (2배이상 증액)
○ 첨단산업기술개발중 소프트웨어 부문 별도 지원	총 400억원중 40억원 지원	총 500억원중 50억원 지원
○ 합리화 및 염색공단 폐수처리 시설 확충		
－ 패션디자인 개발등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 강화를 위해 패션 디자인 기자재구입 지원증액	8억원	20억원(2배이상 증액)
－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사업 지원 강화	110억원	150억원
2. 기금지원대상의 확대 〈시제품개발사업〉		
○ 지원대상 확대	·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고시품목개발 · 공업기반기술과제개발 ·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 공고상의 과제 개발 · 전자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계획상의 과제개발 · 섬유신기술 및 소재관련제품 ·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방지 기술 개발 ·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의 개발	(좌 동)

'94 工業發展基金 運用개선 대비표

	현 행 ('93)	개 선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대상 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업계의 공동개발 조직이 구성된제품, 대·중소 기업간 특화 품목, 계열화 예시품목등의 개발사업 · 생산성향상 우수기업개발사업 ·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 유망수출 상품세계 일류화 추진업체의 개발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해당되는 제품의 신개발에 필요한 금형 개발 (좌 등)</p>
<p>3. 융자조건의 개선</p> <p style="text-align: center;">〈시제품개발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당 한도확대 	<p>3억원(2개이상의 업체가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 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5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 정밀기술경진대회에서 동상 이상 입상한 업체의 개발사업 <p>5억원(2개이상의 업체가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 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8억원)</p>
<p style="text-align: center;">〈첨단산업기술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완화 	<p>1개과제(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기업의 경우 2개 과제)</p>	<p>과제수 제한없음</p>
<p>4. 지원절차의 간소화</p> <p style="text-align: center;">〈융자은행 및 취급기관의 확대지정〉</p>		

	현 행 ('93)	개 선 ('94)
<p>○용자은행</p>	<p>산은, 중기은, 장신은 (신발의 경우 국민, 상업, 한일, 조흥, 동남, 부산은행 추가) 〈신 설〉</p>	<p>(좌 등) (직물, 편직·봉제·염색, 패션 디자인기자재구입, 염색공단 폐수 처리시설 확충 : 대구은행 추가)</p>
<p>○취급은행</p>	<p>- 시제품 개발 기계 : 기계공업진흥회 전자 : 전자공업진흥회 전기 : 전기공업진흥회 일반소재 : 생산성본부 섬유소재 : 디자인포장 개발원 - 첨단기술개발 : 생기원 - 신발 : 신발산업협회 - 신발제의 합리화사업 : 섬유산업 연합회</p>	<p>(좌 등) - 첨단기술개발 · S/W:정보처리산업진흥회 · 기타 : 생기원 (좌 등) (좌 등)</p>
<p>〈취급기관의 심의절차 및 용자취급 절차의 간소화〉</p>		
<p>○심의 단계 축소</p>	<p>부문별 운용심의회 → 총괄 운용 심의회 (2단계)</p>	<p>총괄운용심의회 (1단계) ※ 필요시 실무위원회 개최</p>
<p>○취급기관의 심의기관 명문화</p>	<p>명시규정 없음</p>	<p>신청서 접수기한이 마감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완료토록 명문화</p>
<p>○용자취급절차의 간소화</p>	<p>취급은행에서 심의과정에서 기 검토된 지원규모의 적정성, 기술 성등을 검토하는 사례가 있음</p>	<p>취급은행에서는 채권보전 조치만 취한후 대출토록 유도</p>
<p>〈사후관리용 보고서류 제출 완화〉</p>		
<p>○사업진도보고서 제출의무 폐지</p>	<p>사업진도보고서 (연 2회)</p>	<p>폐지 ※ 필요시 취급기관 또는 심의 위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자금 의 목적의 사용유무, 개발 과정의 애로를 점검토록 함</p>
<p>○사업완료 보고서 (사업완료 후 2월 이내)</p>	<p>사업완료 보고서 (사업완료 후 2월 이내)</p>	
<p>○사업성과 보고서 〈사업완료후 2년간 (합리화 사업의 경우 1년간)〉</p>	<p>사업성과 보고서 〈사업완료후 2년간 (합리화 사업의 경우 1년간)〉</p>	

産業技術혁신에 6400억 支援

- 자체기술개발노력 적극 강화 -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업종별로 전략기술과제를 선정, 자체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 美國·日本·러시아·中國 등과의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64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의 산업기술 정책 기능 및 조직을 대폭 확대 보강하며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발명진흥체제를 구축키 위해 '발명진흥법'을 제정, 발명진흥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허행정의 전산화등을 통해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올해 산업지원제도를 기술혁신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 진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업종별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생산기술연구원을 연구개발 중심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특히 국제기술협력을 본격 추진키 위해 1월중 설립된 韓美산업기술협력재단을 중심으로 韓美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美國의 첨단기술도입을 확대하고 韓日산업기술협력재단의 사업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또 中國과는 공동연구와 합작기업 설립등 기술과 투자가 연계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러시아와는 구소련의 첨단기술 이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며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의 러시아 사무소를 중심으로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프랑스와의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과 항공우주, 원자력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연구 및 기술이전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 실용화전담기구(ANVAR)와의 협력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호주와는 첨단기술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韓·濠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중 전자·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촉진키 위한 워크샵 개최 및 공동연구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국제에너지기구(IEA)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산업 및 기

술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APEC국가간 테크노마트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연구개발 부문에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1414억원, 공업발전기금 1450억원등 총 3134억원을 투입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 부문에 50억원(韓美산업기술협력자금 8억원, 韓日산업기술협력 재단 42억원), 연구기관 재정지원으로 520억원, 韓電·가스공사등 6개 정부투자기관 기술개발투자에 2696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업현장의 공통에로기술 919개의 개발을 위해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며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과 관련, 금년중 9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우리상품의 부가가치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디자인 개발을 위해 산업디자인진흥계획을 적극 추진, 금년중 3천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디자인 지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에 5년내외가 소요되는 핵심적인 中期기술개발과제를 중점 개발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일렉트로-21, 소형산업용 가스터빈등 7개의 개발과제와 액정소자(LCD), 멀티미디어등 5개 신규과제등 총 12개의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첨단기술개발사업을 상반기중 첨단기술산업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 주요산업별 첨단기술부문에 대한 국내외 산업현황과 발전비전을 수립, 제시하고 중형항공기 개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등 항공·우주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2천년대 세계일류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 중 차세대 자동차기술 개발사업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중 산업기술대학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자체훈련시설 확충을 위해 97년까지 대기업에 100개 훈련원을 신설하며 기존 187개 훈련원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중 200여개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 공진청등이 중점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에도 주력,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 추진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컨소시엄사업을 확대, 금년중 30개 사업에 40

역원을 지원하며 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기술원등 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專門家 풀制’ 실시

－ 商工部, 전문가 2500명 데이터베이스화해 9월 실시 －

앞으로 공장현장의 기술부터 특수지역의 마케팅까지 취약한 부문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의 확보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POOL제’를 오는 9월경부터 실시키로 했다.

전문가 POOL제의 전문가는 생산현장의 기술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주요분야의 전문가를 총망라해 구성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의 현직 전문인력, 기업체·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의 퇴직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전문가 약 2500명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우선 제1단계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설치돼 있는 중소기업 정보은행에 특정한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을 의뢰하면 중소기업정보은행은 입력돼 있는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알선, 중개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과 계약을 체결, 일정기간동안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신문공고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문인력의 등록을 받고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어 제1단계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정보은행에 이용회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이 전용 통신망을 통해 직접 필요한 전문가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전문가 POOL제를 시행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자문 및 지도를 받을 수 있게됨은 물론 현재 사장되고 있는 퇴직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도 전문가 POOL제를 실시함을 따라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업체에 비해 기술지도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업체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産業被害조사 관련규정 統合

－ 商工部, 貿易委 · 財務部 告示등 통합 새로 제정 －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등을 조사·판정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정으로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와 불공정 수출입행위 조사의 운영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규정은 과거 산업피해구제제도가 무역위원회 및 재무부 고시와 무역위원회 내부 지침으로 나뉘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업계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통합하면서 긴급수입제한제도상의 산업피해판정에 대한 현실성을 높이고 덤핑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운영 및 절차의 명료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부 규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제도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에서는 제소신청 업체가 농림수산업일 경우 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재배면적이나 어선 수 및 축사의 상당한 유휴 또는 전업여부등을 고려토록 명시했고 조사기간중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잠정조치 신청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 긴급수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존 규정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했다.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제도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에서는 산업피해 및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을 각각 3년과 6개월 이상으로 명시하고 산업피해 조사방법을 설문지 조사와 현지조사로 구체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당사자간 회의개최등을 통해 의견진술 기회도 가질수 있도록 했다.

環境설비 산업지원 擴大

— 商工部, 3월중 尖端산업지정 工發基金 지원대상 추가 —

상공자원부는 낙후된 국내 환경설비산업 육성을 위해 3월중 환경설비산업을 공업발전법상의 첨단기술산업으로 지정, 공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환경설비 수입시 완제품은 8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생산설비 수입시에는 전혀 혜택이 없어 완제품 수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산설비도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세법상의 첨단산업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관세법상의 첨단산업으로 지정되면 수입시 관세의 35%를 면제받게 된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주요 선진국 기술을 100으로 할때 대기·수질 분야는 60~80%, 폐기물 소각기술은 20~30%, 대체물질 개발은 40~50%, 이산화탄소 제거기술은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환경설비산업은 대부분 이 핵심요소 기술을 일본·미국·독일에서 기술료를 주고 수입, 지난 92년까지 환경관련 기술도입이 142건, 2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환경관련 규제는 갈수록 강화돼 국제기후협약은 오는 2천년까지 이산화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고 있으며 UR타결에 이어 환경보전을 위한 그린라운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환경설비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中企 育成支援 擴大

— 商工部, 육성지원자금 2천억중 1549억 市·道에 배정 —

금년부터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중소기업 구조조정지원 사업이 중진공에서 각 시·도로 이양되면서 전국 15개 시도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1451억원을 출연한데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 각 시·도가 금리차 보전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는 중소기업 저리운전 자금 지원규모도 작년 6천억원 수준에서 7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 가용재원은 정부 및 시·도 지원예산을 포함 총 1조 359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상공자원부는 정부가 지원키로 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2천억원중 1549억원을 우선 각 시·도에 배분하고 잔여예산 451억원은 상반기중의 집행실적과 시·도의 자금확보 현황등을 점검한 후 하반기에 추가 배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번 상반기 지원자금 배정은 각 시·도가 관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출연한 연계사업지원 자금과 동일한 액수만큼의 자금을 정부예산에서 추가 지원하고 재정이 취약한 광주, 전·남북, 충·남북, 강원, 경북 등에 대해서는 자체자금 확보액의 20%를 우대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지원 예산 배정에서는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낙후된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왔던 구조조정자금 지원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대폭 전환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수도권에 55.7%, 비수도권에 44.3%가 집행됐으나 올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은 수도권에 31.2%, 비수도권에 68.8%가 각각 배정됐다.

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그동안 중진공이 취급했던 개별기업 자동화, 기술개발, 창업지원등 구조조정사업이 금년부터 각 시·도로 전환되면서 대출금리도 각 사업별로 6.5~8.5% 이던 것이 6.5~7.5%로 평균 0.5% 포인트 이상 인하됐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도 가능하게 됐다.

올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한 지원은 금년부터 시책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이번에 시·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각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및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4 시 · 도별 중소기업 육성재원

〈단위 : 백만원〉

시 · 도	총가용재원 (A + B)	시 · 도 확보재원 (추경포함)				증양재원 (B)
		(A)	운전자금	연계지원	기 타	
서 울	82,058	78,658	56,900	3,400	18,358	3,400
부 산	117,341	104,741	70,000	12,600	22,141	12,600
대 구	90,293	82,043	60,000	8,250	13,793	8,250
인 천	131,693	126,693	118,000	5,000	3,693	5,000
광 주	86,793	78,339	37,000	7,000	34,339	8,400
대 전	26,786	22,286	14,400	4,500	3,386	4,500
경 기	187,992	138,992	67,600	40,000	31,392	40,000
강 원	60,441	54,441	43,000	5,000	6,441	6,000
충 북	45,019	36,919	29,100	6,750	1,069	8,100
충 남	39,266	34,046	29,500	4,350	196	5,220
전 북	27,829	21,829	15,294	5,000	1,535	6,000
전 남	96,888	86,568	37,600	8,600	40,368	10,320
경 북	164,043	149,643	97,200	12,000	40,443	14,400
경 남	140,000	120,000	60,000	20,000	40,000	20,000
제 주	27,143	24,443	17,400	2,700	4,343	2,700
계	1,314,531 (1,359,641)	1,159,641	752,994	145,150	261,497	154,890 (200,000)

※ 시 · 도 확보재원중 운전자금은 관할구역내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포함한 것임.

※ ()내는 잔여예산(45,110백만원)을 포함한 경우임.

모범 中小企業人 포상제 실시

— 商工部, ‘이달의 중소기업인賞’ · ‘中小企業大賞’ 마련 —

상공자원부는 이달의 중소기업인상과 중소기업대상 제도를 마련, 중소기업 발전과 기업경영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기로 했다.

상공부는 최근의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위축되기 쉬운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모범 중소기업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포상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중소기업인상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수출증대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인을 매월 1명씩 선정, 상공자원부장관상을 표창하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심사위원회에서 매월 1명을 선정, 포상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 대상은 이달의 중소기업인 및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우수중소기업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정, 종합대상과 기술·경영·수출·창업 등 4개 부문별 대상으로 나눠 포상한다.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은 매년 5월 개최되는 중소기업주간 행사기간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발전과 지원에 공이 큰 모범근로자, 협력우수대기업, 지원유공자등도 함께 포상할 계획이다.

中企協同조합 세분화 추진

— 商工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立法 예고 —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전문화를 도모키 위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는 관련업체들이 일부 업종을 분할,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중 일부업종을 분할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韓國산업표준분류의 세세분류(5단위)에 의하도록 해 조합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異業種간 교류를 촉진키 위해 협동조합의 특별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의 범위에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부자재 생산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제금대출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은 당해 공제대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제금대출을

받은 자료부터 받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제금 대출의 대손보전 및 기타 채권상각의 보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1일까지 상공부 중소기업 지도과로 항 목별 찬반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工事 예정價 落札 후 즉시 公開 - 財務部, 개선안 마련 2月 25日부터 시행 -

앞으로 정부공사를 입찰할 때 적용되는 複數예정 가격이 落札者가 선정된 후 즉시 공개된다.

또 입찰가격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기초금액의 상하 1% 범위내에서 2~5개의 복수예정 가격을 작성해 입찰장소에 비치하고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간의 폭을 최대한 넓혀 작성되며 입찰에 앞서 입찰 참가자중에서 1인을 선정해 복수예정가격중에서 하나를 추천하게 된다.

財務部는 예정가격이 사전에 누설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2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현재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가장 낮은 금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制限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계약담당 공무원이 복수예정가격간의 격차를 10만원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게 작성하거나 심지어 동일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낙찰자를 선정 후 복수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입찰자로부터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일관 輸出申告制 시행 - 대상업체 · 이용가능품목 制限운용 -

一括수출신고제가 마침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90년에 법적근거(관세법)가 마련됐어도 불구하고, 그간 시행되지 못했던 일괄수출신고제를

도입키 위해 일괄수출신고 사무처리요령(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괄수출신고제란 일정기간동안 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출신고하는 제도로 수출이 잦은 업체의 통관절차 간소화가 주된 목적이다.

財務部 및 關稅廳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환은행의 네고(Nego)用 수출면장 청구때문에 시행이 보류돼 왔던 일괄수출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될 일괄수출신고제는 외국환은행의 면장징구면제(작년 11월 시행) 대상업체 위주로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까닭에 이용기업이 △지정세관 등록업체(93년 11월 현재 162개사) △포괄담보 제공업체(270개사) 및 △수출이 빈번한 업체중 세관장(관할지)이 인정하는 성실업체로 국한된다.

정부는 일괄수출신고업체를 선정할 때 수출건수가 월 10회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는 한편 이용가능 품목도 수출자동승인(AA) 품목으로 국한시킬 계획이다.

또 이용업체 승인시 일괄신고일을 1주일 단위로 지정(복수지정가능), 신고토록 하되 월단위로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일괄수출신고에 대해 포괄수출승인 또는 소액수출승인(2만달러)을 인정해 주되 선적시에 '수출면허전 선적승인'을 세관(통관지)으로부터 받도록 했다.

1종 전기용품 通關審査 강화 - 관세청, 신규·확대지정 물품대상 -

앞으로 커피분쇄기등 신규 및 확대지정된 1종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심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정용 전동채봉기, 커피분쇄기등 1종 전기용품으로 신규지정된 물품과 확대지정된 전기냉장고에 대한 세관의 통관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1종 전기용품과 신고를 해야 하는 2종 전기용품의 대상 및 범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종 전기용품에 새로 지정된 가정용전동채봉기, 커피분쇄기, 전기장판용 등의 발열선, 휴대용 TV카메라, 교류아크용접기는 오는 6월 20일부터 세관의 통관심사시 형식승인 취득여부와 표시

사항 부착 및 한글표시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범위가 확대된 전기냉장고·전기대패·전기드라이브·전기드릴·전기톱·TV수상기(액정TV)·형광램프(100~110V부문) 및 기타전동공구(1~1.5KW) 등의 수입시 형식승인, 한글표시등을 확인, 통관해 주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모터·퓨즈등 他제품 제조용 부품의 형식승인 완화를 요청했으나 공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규정에 의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자가 수입하는 연구개발 또는 시설기자재 외에는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움에 따라 추후 다시 검토키로 했다.

품질경영(QM) 정착 협조 요청

공업진흥청은 지난 2월 17일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및 산업별 품질경영추진 본부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각 추진 본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경영 정착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품질경영이 빠른 시일내에 한국적 경영문화에 맞는 신산업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年度別 重點推進 事項

— '94年度 —

- 最高經營者 意識改革教育 強化
- 品質經營 推進基盤 構築을 위한 制度整備
 - 品質經營促進法 施行을 위한 下位法令 整備
 - ISO 9000 國際品質保證體制 國內認證 實施

- 「品質經營 100」制度의 實施

- 品質經營 教育體系 전면개편

— '95年度 —

- 國際品質保證體制 認證制度 亞·太 相互認定機構 設置

- 從業員 50人 以上 製造業體 分任組 組織完了

- 推進本部別 品質經營水準 評價實施

- 消費者가 參與하는 品質比較評價 實施

— '96年度 —

- 從業員 30人 以上 全產業의 分任組 組織 着手

- 서비스 分野 國際品質保證體制 認證制度 實施

- 全 等級業體의 ISO 9000 認證獲得 推進

- ISO 9000 國內認證機關의 國際認證機關과의 相互認定 推進

- 廣告의 信賴性 검증을 위한 品質比較評價 事業의 實施

— '97年度 —

- 中小企業 品質經營 推進本部 擴大 (39個 → 125個)

- 消費者를 위한 品質情報提供 事業의 民營化 推進

- 貴金屬 品質에 관한 特別管理制度 新設 推進

- 電氣用品 安全管理 制度의 先進化

— '98年度 —

- 從業員 30人 以上 全產業의 分任組 組織 完了

- 민간주도형 國際品質保證體制 認證制度 確立 ('98年末 품질인증관리원 設立)

- 推進本部 중심의 自律的 品質經營體制 定着

- 品質比較評價 事業의 民間消費者 團體 이관

▣ '94 品質經營 推進施策 ▣

汎産業的 品質經營 實踐基般의 構築

- 「品質第一主義」의 定着
- 品質經營 擴散雰圍氣의 造成
- 品質經營 促進制度의 強化
- 品質保證體制 認證制度의 實施
- 韓國的 經營文化에 맞는 品質經營技法의 開發·普及
- 品質向上 促進을 위한 消費者 主權의 確立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중 개정(안) 입법예고

공업진흥청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중 개정(안)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기술규정등에 관련된 규칙안 입안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공업진흥청 공고 제 1994-336호, '94. 2. 25) 했다.

1. 개정 취지

제조업체의 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내용을 간소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가.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 절차 간소화
- 나. 제조업체 협의회 사후관리 면제
- 다. 기술계 인력 고용의무화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업진흥청(문의처 : 안전관리과 503-7927)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의견)
- 2) 성명 (단체 의견을 단체명과 대표자)